

[www.eai.or.kr](http://www.eai.or.kr)

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The Military Coup and Future of Democracy in Myanmar

**제2세션. 미얀마 민주주의 전환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원방안**

**Session II. Challenges of Myanmar's Democratic  
Transition and Possible Way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serve Democracy**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 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 제2세션. 미얀마 민주주의 전환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원방안

##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 이숙중(EAI 시니어펠로우, 성균관대 교수)  
 패널: 김현준(고려대 교수), 박은홍(성공회대 교수),  
 배현진(외교부 동남아 2 과장), 웨 노에 흐닌 쏘(행동하는미얀마청년연대 리더),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Q. 웨 노에 흐닌 쏘:**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 운동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는 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taw (CRPH, 연방의회대표위원회)가 있고, 현재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정당 의원 17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CRPH 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연방제에 의거한 민주주의 국가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하고 싶음. 미얀마가 1962 년 네 윈 (Ne Win) 집권 이후부터 소수민족 자치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민족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CRPH 가 어떻게 포괄하여 안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로는, 미얀마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CRPH 가 새롭게 정부로 출범한다면 연합군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젊은 층들은 어떻게든 무장단체에 합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불거지고 있음. 시민들이 CRPH 와 손을 잡고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함께 연합군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A. 배현진:** 외교부 동남아 2 과에서는 미얀마를 비롯한 내륙 동남아 5 개국과의 양자관계, 한-메콩 협력을 담당함.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틀 안에서도 균형 잡힌 접근법이 중요함.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라는 신남방정책의 큰 목표 하에서 한-미얀마 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함. 국가비상사태 이전 작년 총선 때, 한국의 코로나 19 상황 하에 선거를 실시한 경험을 미얀마와 공유하기 위해 우리 선관위와 미얀마 선관위가 화상 회의를 주선했고, 총선 당일에는 대사관 주도로 한국 측의 선거참관단도 파견됨. 그 외에도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경제협력 산업단지 등 시그니처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됨. 작년 말에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차관보 등 고위인사의 미얀마 방문이 성사됨.

2 월 1 일 비상사태 직전 현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여 주미얀마대사관 명의로 1 월 29 일 성명을 발표함. 2 월 1 일 새벽에 아웅산 수찌 (Aung San Suu Kyi) 고문이 구금당하고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정부 조치에 관해서는 공식입장 발표, 실질 대응 조치, 재외국민 보호, 세 가지 카테고리 나눌 수 있음.

정부 공식 입장으로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의 네 차례 외교부 대변인 성명, 대통령과 총리의 SNS 메시지,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음. 이를 통해서 군부의 무력사용 즉각 중단, 아웅산 수찌 포함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회복 등을 강력히 촉구함. 이와 함께 외교부 1 차관은 주한 미얀마 대사를 만나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미얀마인 유학생 대표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함. 그러한 조치들도 대외 입장 발표와 함께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될 것.

3월 12일 발표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핵심 내용은 국방 치안 분야에서의 신규 협력 중단, 군용 물자 수출 불허 (전략 물자 수출 허가 통제 강화), 대(對) 미얀마 ODA 재검토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對) 미얀마 ODA 사업 재검토 진행 중. 2019년 기준으로 연간 9,000만 불 정도가 미얀마에 제공되었으며 다수의 사업이 존재함. 개별 사업들을 외교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생 관련 사업, 인도적 지원은 지속할 방침. 외교부에서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내 체류하는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함. 미얀마 정세 악화에 따라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 정부가 거의 최초.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 전에는 우리 국민 3,500명이 미얀마에 체류하고 있었음. 미얀마 정세가 악화되면서 최근 정부에서 미얀마에 대한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함. 미얀마에 있는 우리 국민은 중요한 용무가 아닐 경우 철수할 것을 권고. 국민들이 귀국하려면 비행 편이 필요하나 작년부턴 코로나로 인해 미얀마 정부가 한-미얀마 간 비행 편을 제한함. 주 1회 제한적으로 운항하던 것을 증편, 임시 항공편을 늘려서 우리 국민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함.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됨. 미얀마 정세를 살피면서 국민,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 취할 예정. 향후 미얀마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외교부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임. 가장 중요한 것은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 안전, 복지임. 미얀마 국민들의 뜻, 민주주의 열망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예정. 본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도 대(對) 미얀마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할 예정.

**Q. 이숙중:** 첫째로, 지금 사태에서 변화가 가능하려면 군부에서 이탈자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군부 내에서 분열이 있을 수 있는지? 즉, 민 아웅 흘라잉 (Min Aung Hlaing) 총사령관을 축출하거나 군부의 태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로,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를 국제사회가 인정해주는 것이 군부 내 이탈자를 증가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지가 궁금함. 셋째로, 소수민족 반군들과 반군들의 포지션에 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반군은 군부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민주화 세력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음. 11개의 소수민족 반군이 있는데 이들의 포지션이 모두 다름. 반군이 어느 쪽으로 연합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A. 박은홍:** 태국도 미얀마도 가장 절박한 국가적 이슈는 National reconciliation(국민화합) 임. 지금의 위기국면 속에서 과거의 아웅산 수찌 정부가 국제사회에 실망을 준 점이 있음. 로힝야 문제는 물론이고 21세기 뽕롱회의 또한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음. 뽕롱회의는 아웅산 장군이 독립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연방국가를 위해 만든 것. 이번 기회에 CRPH가 지지하는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가 소수종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명실상부 연방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헌법을 만든다면, 위기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함. 실제로 현재 시민 불복종 운동 과정에서 로힝야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로힝야족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됨. 공감의 민주주의가 굉장한 힘이 될 것. 지금은 암담할 수 있지만 그러한 힘을 원동력으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함. 이것이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가 하나의 명실상부한 국민국가의 전제조건인 국민화합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함.

소수민족 반군 문제 관련, NCA(National Ceasefire Agreement; 정전협정)에 가입한 소수민족 반군은 약 10 개 정도임. NCA 에 가입한 반군은 이번에 쿠데타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함. 가입하지 않은 일부 소수민족, 특히 중국과 관련 있는 와족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 부분을 언론에서 소수민족 반군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위험함. 소수민족 반군들이 CRPH 를 전적으로 지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CRPH 와 CRPH 가 지지하는 National Unity Government(국민통합정부)에 소수민족의 정치적 지분이나 의견이 얼마나 수용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예전처럼 단순히 선언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나눠주는 것이 실행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임.

이탈자 문제에서 이상적인 사례는 1986 년 필리핀에서 피플파워(People Power)가 발생했을 때 피델 라모스 (Fidel Ramos) 육군 참모총장이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결국 피플파워가 승리한 것. 지금의 땃마도 군부는 모노리틱(monolithic)한 측면이 강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음. 그러나 국제사회가 집중적으로 미얀마 강경파 군부에 대한 제재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중국은 아웅산 수찌와 땃마도 양측과 관계를 맺어왔음. 지금 상황에서 내전으로 번지면 중국의 일대일로도 무산되며 모든 것을 잃는 시나리오가 될 것. 이러한 공멸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중국의 태도변화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미얀마 정부가 독자적 제재로 인해서 독보적인 가치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얀마 내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음. 해킹을 통해 2-300 개의 군부 기업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 포스코가 포함됨. 외교부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강판 등을 통해 군부의 자금줄이 되었던 것을 시민사회단체와 국제 인권 사회가 거론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Q. 이숙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실제로 미얀마의 가스산업에 많이 관여되어 있음. 무역 데이터를 찾아보니 미얀마와의 수출입 교역 부분에서 한국은 6-9 위 정도이며 주요 교역국은 아님. 수출입의 1/3 을 차지하는 제 1 교역국은 중국. 교역으로는 한국이 영향력이 없는데 가스, 광산과 같은 산업 쪽은 영향력이 있는지?

**A. 배현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일부 미얀마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외교부 차원에서도 해당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상당한 기업들이 국가비상사태 선포인 2 월 1 일 이전부터 그러한 문제 제기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함. 2 월 1 일 이후에 문제제기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더욱 신경 쓰고 있음. 그러나 사실과 동떨어진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음.

**Q. 이숙종:** 포스코는 2000 년에 민영화해서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임. 여러 계약 당사자가 미얀마 군부가 아니라 주로 미얀마의 공기업이라서 계약 절차상의 문제도 있음.

민주화 운동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동남아 지역, 나아가서 아태지역의 국제정치지형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미얀마에는 쿠데타 이전에도 반중(反中) 정서가 있었고 이번 쿠데타 이후 중국이 보여준 포지션에 대한 미얀마 시민들의 실망감으로 인해 반중 감정이 증가했음. 그러나 군부와 중국은 일대일로 등 여러 부분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웅산 수찌 정부도 사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음. 이러한 미중관계, 국제정치적 지형에서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A. 김현준:**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미중관계 속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가 바이든 행정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바이든 정부도 쿠데타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취임하자마자 미얀마 사태가 터짐.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국제정치적인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외교차관도 언급했듯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군부를 최대한 설득해서 공정한 총선이 되지 않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혈사태를 막고, 아세안 차원에서 중국의 상황을 주시하는 것. 미얀마 사태가 발발하자마자 미얀마 관련 미국이 추진해오던 민주주의 증진과 같은 이해관계를 논하는 사람들은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얀마 사태를 미중관계 구도로 가져가기 어려움. 우려되는 부분은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난민 유출, 내전 상황으로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점차 힘을 받게 될 것.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국제여론과 지금까지 발전해온 다양한 인권 장치, 국제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들과 미국, EU 에서의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들이 더 활발히 작동하게 되면 미국이나 EU 측에서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 전망함.

**Q. 이숙중:** 현재 아세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헌장에 rule of law, good governance, democracy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고 성명만 발표하는 것에 그침. 아세안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할 때, 이른바 아세안 중심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인가? 두 번째로, 태국은 미얀마의 제 2 수출국이며 카친주에 난민이 발생했을 때 태국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태국 정부는 이를 받을 것이라고 보는가, 아님 중단할 것인가?

**A. 이재현:** 아세안 헌장에 개별 국가의 자유, 불간섭이 먼저 명시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법치가 언급됨. 그러므로 아세안 입장에서는 내정 불간섭을 내세워도 아세안 헌장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 그런 식으로 아세안 중심성이 약화될 것이었다면 1997년, 2006년 등 아세안 국가 내부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세안 중심성이 약화됐을 것. 아세안 토크샵(Talkshop)도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언급되었음. 아세안 중심성의 문제는 아세안이 내부에 속한 국가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외부세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들로부터 아세안의 역할을 인정받는가를 더 중요시하는 데 있음. 즉, 역량의 문제보다 외부와의 관계가 더 중요시됨. 물론 역량이 부족하면 중심성에 대한 의문도 늘어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위험한 수준은 아님.

태국과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무장단체들이 태국에 많이 있음. 현재 태국 집권세력의 성격을 보면 2014년에 군부 쿠데타로 집권, 개헌함. 미얀마와 유일한 차이는 2019년 태국 군부는 선거를 치러서 헌법에 의해서 집권을 한다는 것. 현재 미얀마 군부는 아직 쿠데타만 일으킨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태국 정부도 강경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서로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음.

**Q. 이숙중:** 첫째로, 한국 시민으로서 세계시민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돕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가? 둘째로, 미얀마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에서 폭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폭력투쟁으로 전환했을 때와 비폭력 투쟁을 유지할 때의 장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이현윤:** 미얀마 시민단체를 이끌면서 시민운동하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한국 시민사회가 다른 그 어떤 시민사회보다 적극적으로 미얀마를 지원한다는 것을 미얀마 시민들이 잘 알고 있고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함. 국제시민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미얀마 군부가 잘 인지하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함. 우려되는 부분은 민주화의 각 단계별로 민주화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중국-러시아 세력이 군부세력을 뒷받침한다는 것. 중국-러시아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주화에

실패하고 군부는 당연히 중국·러시아에 의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 시민들의 항쟁은 이어질 것이지만 동력이 떨어지고 장기화되면서 희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한국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함. 당장 내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양곤을 벗어나서 버마족 외의 다른 민족들이 있는 외곽지역에서는 (평소라면 버마족과 대치하는) 무장세력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교합을 하면서 내전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고 함. 폭력 투쟁이 진행될 것인가, 비폭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개인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민주주의를 요구할 것은 분명해 보임.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으면 이들도 지치지 않고 싸움을 해 나갈 것. 당장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기보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펀드 적립이나, 태국 국경을 통한 은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광주-미얀마 연대 등, 미얀마를 돕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들이 다수 존재함. 시민으로서 돕고 싶다면 이런 시민단체 통해서 지지를 표명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Q. 이숙중:**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응 조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외교를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를 다자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ARF에서 의제로 상정할 수 있는지? 소다자주의 차원에서 역내 국가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돕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유사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할 때 더 힘을 받을 것임. 또한, 아시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EU 도 목소리를 내고 있음. 한국은 스웨덴이 주도했던 Drive for Democracy 소다자회의 회원임. 유럽 국가들과 연대하면 훨씬 큰 임팩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런 방안을 고려해본 적 있는지?

**A. 배현진:** 미얀마 이슈 자체만 놓고 소지역 협력체와의 협의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검토를 한 적은 없음. 그러나 주요국과의 협의, 장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미얀마 이슈임. 지역 정세라는 큰 틀에서도,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신남방정책에서도 미얀마 이슈는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 충분히 가용한 방안이므로 검토를 거쳐 진행하겠음.

**Q. 웨 노에 흐닌 쏘:**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최대한의 저항 발언을 해옴. 2주 전까지는 강연이나 토론회에 참석하면 희망찬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희생자가 700명을 넘는 상황임. CRPH도 있는 상황에서 Z세대가 연합군과 협력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음. 타협하면 군부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있음. 700명이 넘는 미얀마 희생자와 로힝야 사태를 생각하면 타협을 용납할 수 없음. 한국에서도 과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예시가 있음. 시민 불복종 운동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음. 타협하자니 우려가 되고 연합군에 참여하자니 방법을 모르는 것이 현실. 이 절망적 상황에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음. 마지막으로 희생자 740명 중 40%가 2-30대(Z세대 포함)임.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향하려면 젊은 세대의 정치 대항 세력, 시민단체 세력을 키워야 함. 기득권 세력을 신뢰할 수 없고, 정치 성숙도가 낮으며 시민사회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을지?

**이숙중:** 현재로서는 해당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없어 안타까움. 지금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속히 군부 탄압이 멈추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 길을 열리길 기원하고 있음. 어려운 과정 속 대한민국이 시련을 겪는 나라에 보인 정책적인 대안과 시민들의 연대 움직임은 우리에게 커다란 학습의 기회가 됨. 한국이 가치 외교, 민주주의 협력을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 협력을 하는 데에 좋은 경험이 되었음. ■

■ **저자: 김현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부교수 및 선임연구원, 미국 세인트올라프대학교 (St. Olaf College) 방문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The Massacres at Mt. Halla: Sixty Years of Truth-Seeking in South Korea*, *Transitional Justice in the Asia Pacific*, "The Prospect of Human Rights in US-China Relations: A Constructive Understanding," 등이 있다.

■ **저자: 박은홍** 현 성공회대학교 정치학과 및 아시아비정부기구학과(MAINS) 교수. 대표저서로 <동아시아의 전환: 발전국가를 넘어> 등이 있고 <States of Democracy>,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in Asia>에 공동필진으로 참여했다. 미얀마(버마) 관련 논문으로 "미얀마, '질서있는 이행' 모델: 체제내 변화에서 '체제 변화'로의 진화", "미얀마 2018: '로힝자 위기'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갈림길", "민족혁명과 시민혁명: 타이와 미얀마", "탈식민체제로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식민성: 수카르노와 네윈 시기의 혁명노선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와 인권외교: 버마군사정부에 대한 외교적 제재의 타당성" 등이 있다. 태국 국립 탐마삿대학교 정치학부에서 수학한 바 있다. 태국 왕립 쫄라롱껀대학교 정치경제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저자: 배현진** 고려대학교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아시아지역학을 수학했다. 주미국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외교부 동남아 2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 **저자: 웨 느에 흐닌 쏘** 만달레이 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코트라 미얀마 상무부 공무원 연수, KDI 국제개발협력 (MDI)공동연구 역량강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미얀마 고위급공무원 연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어-미얀마어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현지어 교육 강사와 아시안허브 미얀마어 집필 및 강사로 재직하였다.

■ **저자: 이숙중** 동아시아연구원(EAI) 시니어 펠로우이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공동대표.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 객원 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교수강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EAI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편저에는,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세계화 제 2 막: 한국형 세계화와 새 구상》(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 **저자:** 이재현\_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호주 Murdoch University 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ARF Eminent and Expert Persons' Group (EEP) 멤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전 한국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의 역할” (2018), “비정형성과 비공식성의 아세안 의사결정” (2019), “G-Zero 시대 글로벌, 지역 질서와 중견국” (2020) 등이 있다.

■ **저자:** 이현윤\_브랜다이즈 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에서 말레이시아 시민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따비에에 미얀마 어린이 이야기책 제작 프로젝트, 하트하트재단의 방글라데시 꼬람폴라 안과 및 준전문안과인력 양성 프로젝트, 하트하트재단 & 삼성꿈장학재단 버마이주노동자교육위원회(BMWEC) 카렌족 난민 어린이학교 프로그램, ATASK 의 광역 보스턴 지역 아시아계 이민여성 법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유엔개발계획(UNDP) 허리케인 카트리나 복구 프로젝트 그레나다 젠더교육 보조 트레이너로 재직하였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jhjun@eai.or.kr](mailto:jhjun@eai.or.kr)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 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 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 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 호 (을지로 4 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mailto:eai@eai.or.kr) Website [www.eai.or.kr](http://www.eai.or.kr)